

##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 일자리·경제·인구 정주 선순환 구축

고용부, 부산·인천 등 5곳과 진행 이성희, 부산관광·마이스업 활성 지원센터 방문 주력산업 관광·마이스업 활성 지원센터 방문·전시 전문인력 양성 등 시행



국적으로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 등이 양호하지만,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이 심화되고, 중소기업 빈자리리는 올 1월 기준 19만8000개에 달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는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15일 고용부와 자치단체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날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에는 부산을 비롯해, 인천, 충북, 전북, 경북 5곳이 참여한다.

부산시의 경우 지역 주력산업인 관광·마이스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훈련, 일경험사업, 고용서비스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종합한 '부산 관광·마이스업 일자리 붐-업(Boom-up)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통역·전시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등 맞춤형 채용 지원, 임금·복지 지

원을 통해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등 패키지 지원 모델을 설계해 시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관광·마이스업은 전문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산업인만큼 코로나19로 유출된 인력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맞춤형 교육훈련과 신규 채용 지원, 장기 근속 지원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오늘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설계하고, 향후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부단체장이 직접 주관하는 지역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협업 및 프로젝트 성과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무엇보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청년 등 보다 많은 지역 인구가 정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 프로젝트가 지역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거둬 '양질의 일자리-지역 경제 성장-인구 정주'의 선순환을 작동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부산의 관광·마이스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지자체 협업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가 신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성희 차관(사진)이 올해 부산시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관광·마이스업)'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부산관광·마이스업 지원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 사업과 정책을 지역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연계·집중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이성희 차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국적인 고용 상황은 견조하게 유지되는 반면, 지역에서 체감하는 고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2월 기준 고용상황은 전

## 정부, 원하청 간 근로복지 격차 축소 돕는다

고용부, 상생연대 형성지원사업 공고 대기업, 협력사 위한 자원 마련 시 지원 사업주 출연분 100%, 근로자 200%

원하청 간 격차 축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상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일 대기업(원청) 노·사가 협력사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 노·사 등의 출연으로 형성된 재원을 통해 영세한 2·3차 협력사 등의 복지시설 설치, 학비·건강검진 등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사 근로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로하고 원하청 간 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모 대상은 노·사가 출연하려는 기업(원청),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등이고, 이들이 재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비영리법인에 출연함으로써, 사업주는 법인세, 근로자는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근로자 출연분은 최대 200%로 책정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과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은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통해 원하청 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되고, 상생과 연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환경부, 배달용 전기오토바이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

총 320억 보조금 지급해 4만대 보급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엔 50억 편성

올해부터 배달용으로 전기오토바이를 구매할 시 보조금(국비 지원) 10%를 추가로 지원 받는다. 배달플랫폼 노동자가 자신의 오토바이가 배달용임을 입증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총 320억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해 올해 전기이륜차 4만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또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500기 보급을 목표로 50억원 규모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

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경형 오토바이는 140만 원, 소형은 230만 원, 중형 및 기타형은 270만 원, 대형은 30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 보조금 상한액 자체는 지난해와 같으나, 종전에 기타형 상한액이 적용된 화물운반용의 상한액이 올해부터 대형과 같은 3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오토바이는 기존에 '등판능력이 우수한 3개 전기이륜차의 평균'과 차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했었다. 올해부터는 '전체 전기이륜차 등판능력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다. 기준이 바뀌면서 소형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8~10만 원 증

가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올해부터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10% 더 받는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화물운반용과 마찬가지로 배달용은 다른 이륜차보다 더 자주, 더 긴 거리를 운행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보험료가 분 단위로 책정돼 실제 운행 시간만큼 보험료를 내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된 상태면 배달용으로 이륜차를 구매했다고 인정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새로 배달업에 종사하기 위해 이륜차를 구매할 때 보험증서를 사후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농식품부, 스마트팜 컨소시엄·기업 13곳 선발

스마트팜 수출·수주 정부 밀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실시한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모집에서 4개 컨소시엄과 9개 기업이 최종 선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13곳의 스마트팜 수출 및 수주를 정부가 밀착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컨소시엄별 프로젝트 계획을 사전 점검하기 위한 발대식이 정부세종청사에서 19일 개최됐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에는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적용돼야 하므로 한 기업의 힘만으로는 규모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 지원은 해외 수주 프로젝트 계획을 보유한 스마트팜 수출기업 컨소시엄을 선발해, 1년간 해당 프로젝트를 전담·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그간 수출기업과 여러 차례 가진 간담회에서 "스마트팜 분야에서도 프로젝트 수주 제안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성공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현장의 목



세종 어진동 정부청사 내 농식품부

소리를 반영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발대식에는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 혁신정책관, 정의영 KOTRA 혁신성장본부장이 참석해 선발된 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별 프로젝트 계획과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컨소시엄은 현지 기반 구축과 컨설팅, 전담직원 매칭 등 프로젝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동, 독립국가연합(CIS) 스마트팜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기업 간 상승효과와 발생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전통시장 51곳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농식품부, 22일까지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3월 20~22일 사이 기간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권, 6만7000원 이상 → 2만 원권을 받는다.

소비자들은 행사참여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참여 시장 목록 등 세부사항은 공식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월21일~4월 말 기간에 총 600억원 규모(국비 180억 원)로 6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 농어촌공, 한국형 스마트농업 확대 나서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한국농어촌공사가 20일 한국형 스마트농업을 확대해 미래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 확대를 청년 농업인 육성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이는 스마트팜 전문 교육을 마친 청년들이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 없이 스마트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스마트팜 온실을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공사가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2022년 이후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 등 4곳에 생산·교육·연구 기능을 모두 갖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구축했다. 스마트농업 실현 공간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해엔 '스마트농업전담조직'을 구성해 스마트농업 전환 가속화를 꾀하고 있다.

또 온실 중심의 기술에서 더 나아가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본부

/농어촌공사

노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스마트농업을 접목한 '노지 스마트팜 시범단지조성사업'으로 스마트농업의 저변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스마트농업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농산업수출활성화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움직인다. 공사는 수출국 인허가 취득을 비롯해 해외박람회·로드쇼 지원, 맞춤형 정보·컨설팅 운영 등을 통해 수출 역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